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건의서

* 다음은 본 연합회 대구·경북협의회(회장·김남현)가 지난 6월 20일 발생한 경북 영일군 소재 일반폐기물매립장 붕괴사고 이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을 환경처에 건의한 것임.

1. 배 경

-금년초 부터 빈번히 발생한 낙동강 수계의 수질오염 사고는 지역민은 물론, 모든 국민과 기업인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환경보전 활동에 대하여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낙동강 수계 오염사고에서 밝혀진 대부분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업장에서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 방류로 인함이 아니라, 사업장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에 의한 폐유 및 세척유, 분노, 농약등의 유출사고로 인한 것임.

-사업장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인한 오염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년들어 대구경북의 낙동강 수계 주변에 소재한 사업장은 무단 배출업체로 지목되어 언론등에 매도되어 왔으며 소속 사업장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관리인은 환경오염 예방업무등 본연의 업무보다, 환경청, 도청, 시청, 검찰 등의 빈번한 단속에서 시달려 오음에 따라, 최일선 환경관리인으로서 사기가 극히 저하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은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낙동강 수계의 오염으로 미칠 수 있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각 지역별 자율적인 활동조직을 구성하고 불시 사고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지역별 순찰 및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활동 등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러나, 지난 6월 20일 03:30경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최대의 매립장을 확보하고 있는 경북 영일군 소재의 (주)유봉산업의 매립장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또 다시 각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의 환경관리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2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그 책임소재 문제에만 급급해 하며 지역 사업장의 심각한 환경 문제는 도외시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환경관리인은 기업주와 환경 단속 관청의 중간에서 의욕을 상실함은 물론, 환경정책 부처 및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따라, 우리 연합회는 대구경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약3,300여개 업체환경관리인의 건의와 불만 대한 해소책등을 충분히 건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현실을 묵과 할 수 없음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적체 폐기물에 의한 2차 오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 오염의 주범으로 또다시 매도 당 할지도 모르는 각 사업장 환경관리인의 권익보호와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폐기물처리정책과 적극적인 대민 행정으로의 개선을 위하여 건의함.

2. 현 황

-대구경북지역 폐기물 배출업체 현황

업 체 수	폐기물 발생량	처 리 량				비 고
		자체소각	재 활용	해양투기	위탁처리	
약 3,300개소	132만 TON/년	41%	24.5%	2.7%	31%	

-(주)유봉산업 붕괴사고의 복구 상황 및 향후 계획 (경상북도 자료)

- 응급 복구 완료 : 94. 7. 2. 14:00
- 항구 복구 소요일정 : 94. 7월부터 3개월 이상 소요 예상(94. 7. 7자료)

3. 문제점

-유봉산업 복구후 정상 매립이 가능 할때까지 각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대책이 없음(최소 3개월 이상 예상)

-계절적으로 장마기 임에 따라 사업장내 보관장소 확보에 곤란 및 보관 방법상의 문제

-지방공단등 일부 공단지역에서는 임시보관등의 방편이 가능할지 모르나, 대구경북, 특히 대구지역 배출업체의 특성상 공단 이외의 영세업체에서의 자구책 마련은 극히 어려운 상황으로 노천 방치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이 예상됨.

-악성 폐기물의 사업장내 장기 보관시 악취 발생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민원 발생이 우려됨.

-일부 사업장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고 특정폐기물 수수료와 버금가는 처리 비용 징수등의 폐기물 처리업체의 횡포로 기업활동 위축 및 불신 현상 발생.

—환경 행정기관이 타지역 처리업체에 처리토록 중용함에 따라, 일부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상승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전반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향후 상승 될 것임.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 제한으로 타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중소기업의 자체 부저내 폐기물 보관이 어려울 경우 불법 투기 행위 발생이 우려됨.

—지방 자치단체 및 환경관리청등 업무의 이원화 및 기관별 소관사항 불분명으로 폐기물 정책의 부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함.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으로,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으로 대책등의 건의 사항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음.

—행정기관의 대책으로서는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하며,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는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4. 건의 및 제도의 개선

—현재 대구경북지역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겪고 있는 이상 3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원활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건의하며 아울러 제도의 개선을 촉구함.

4-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대책 강구

시·도지사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폐기물은 시·도지사가 그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기업체에 대한 완벽한 대책안을 제시 하여야 할것임.

4-2 폐기물 처리 정책의 일원화

환경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는 환경처 장관은 일관된 환경행정으로 폐기물 처리 제도의 일원화를 기하여야 할것임.

• 현재의 특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구분하여 환경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양분하여 관리토록 함은 행정기관 간의 책임소재 불분명과 업무의 이중성등으로 인하여 관리가 어려움.

• 산업 폐기물의 거의 대부분이 일반, 특정의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폐기물에 대한 인

식이 모든 폐기물을 혐오시 하고 있음을 직시 하여야 할 것임.

4-3. 폐기물 처리사업의 영업구역 재한 해제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구역을 일정 지역을 한정하여 허가해중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처사로 비쳐지고 있음을 직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영업지역을 해제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쟁 및 원활한 무해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므로써, 폐기물 처리의 육성발전에 기여 하여야 할 것임.

4-4. 사업장 발생 일반폐기물의 시·군 매립장 사용 조치

93년도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특정 폐기물 중 일부 일반 폐기물로 분류 시행되기까지, 약 8개월 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 조례는 그 규정에 상응하는 조례로 개정하지 않음에 따라, 일반폐기물은 시, 도지사가 처리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 전가하는, 아직도 경직되고 편의적인 행정이라는 민원인 다수의 질타를 직시하여야 할 것임.

4-5. 공업단지 자체 관리운영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공업단지의 신, 증설시에는 공단 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처리시설이 확대 증설되어야 할 것임.

4-6. 폐기물 처리사업의 활성화 지원

지역내 일부, 환경의 심각성을 깊이 깨우치거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거나 환경 사업분야의 유망성에 대하여 투자의 가치를 느끼면서, 폐기물의 처리업에 기여하고자 하나,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된 소수의 민원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현재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에서는 폐기물처리 정책이 확립 되지 않은 한 힘들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범국가적인 정책으로 앞장서, 지역민의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행정지원과 아울러,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 정책에 부응하는 투자가의 방패막이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7. 붕괴매립장의 빠른 시일내 복구로 재사용 조치 및 다수의 매립장 확보

붕괴된 매립장의 조속한 복구로 매립장의 사용이 재개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 일부공단지역(왜관 금산 공단 등)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매립장을 확보한 폐기물 처리업체도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임(다수의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유도하므로써 경쟁력 강화) ◀